

제1권 2호 2006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임 순 희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CONTE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1권 2호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07년 1월

발 행 2007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3
2. 유엔	7
3. NGO	10
4. 분석 및 평가	16



|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21
2. 일본에 대한 반응	26
3. 유엔에 대한 반응	32
4. 남한에 대한 반응	33
5. 분석 및 평가	39



|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47
2. 납북자·국군포로	50
3. 이산가족	54
4. 분석 및 평가	55





1. 개별국가	3
2. 유엔	7
3. NGO	10
4. 분석 및 평가	16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 이민법원 남한 정착 탈북자에 대한 망명 허용(7.6)

- 캘리포니아 주 소재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남한 국적의 탈북여성 최 모 씨에 대해 망명 승인함.
 - 최 모 씨(당시 33세)는 2001년 중국국경을 통해 북한을 탈출하여 2002년 남한에 정착
 - 2005년 7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 2006년 초 망명 신청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 도입 제기(7.19, 20)

-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 ‘한미교회연합’, ‘복음주의연합’ 등 북한인권운동 단체들과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가 헬싱키협약을 모델로 한 대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촉구(7.20)함.
-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협약과 같은 포괄적이고도 다면적인 새로운 안보의 틀을 제안(7.19)함.
 - “옛 소련이 도덕적 부당성 때문에 붕괴됐던 것처럼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탈출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북한 체제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

선양 미 총영사관 진입 탈북자 미국행(7.22)

- 5월초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4명의 탈북자 중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출국함.
- 1명은 국가보위부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 인권탄압 관련자로 규정하여 불허

부시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언급(9.14)

-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였다고 주장함.
 -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미 정부 탈북자 마영애 대상 노동허가서 발급(9.14)

- 한국 정부의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2006년 3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 지부가 남편과 함께 노동허가서를 발급함.
 - 노동허가서는 미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허용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망명허가 방식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 개성공단 근로권 언급(11.11)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사업 이익금이 북한지도부의 돈줄이 되고 있을 가능성과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문제를 제기하며 개성공단 사업 유보를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보도함.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12.7)

- 미국 유엔대표부는 미 디펜스포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공동으로 유엔본부 건물 제7회의장에서 각국 외교관과 유엔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토론회를 개최함.
 - 강영수, 김옥순 등 탈북자 3명 참석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해 통제권과 감독권이 없으며 임금지불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6자회담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거론 제의(12.7)

-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레프코위츠 특사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6자회담의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과 북한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 북핵문제 등 다른 현안을 다루는 범위안에서 인권문제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나. 유럽연합

유럽의회 의원,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 실태 파악 추진(12.13)

- 유럽의회내 한반도관계대표단은 벨기에 주재 유럽연합 체코대표부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체코 내 북한노동자 실태와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 상황을 파악하여 줄 것으로 서신으로 요청함.
 - 이스트반 셉트 이바니 의원(한반도관계대표단 부회장)이 주도

다. 한국

노무현 대통령, 북한인권문제 언급(9.11)

-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함.
 -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 민족 국가라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유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보편적 원칙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발표(12.11)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함.
- 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의 범주에 북한지역내 북한주민의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함.
-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함.
 - 첫째,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이 존중되어야 함.
 - 둘째,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 넷째,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함.
 -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셋째,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다섯째,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제61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한국 찬성 표결(12.19)

- 제61차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최초로 찬성 표결함.

2. 유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보고서(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발표(9.15)

- 비릿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61차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 발표함.
 -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상황 기술
- 특별보고관 임명 이후 작성하여온 북한인권보고서와 구성상으로 동일함.
 - 4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자이며, 인권규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식량권, 생명권, 안전권, 이동의 자유, 망명 및 난민 보호, 자결권, 표현, 집회, 종교의 자유 등 '일반적 우려', 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자의 권리 등 '특별 우려' 사안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기술함.
-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이 긴장을 고조시켜 인도적 지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언급함.
 - 홍수로 인해 식량사정에 심각한 영향 초래
- 마크스 놀랜드와 스테판 해거드가 작성한 『기아와 인권: 북한기아의 정치학』을 인용하여 대북식량지원의 전용 가능성을 언급함.

- 북한이 긴급구호를 거부하고 개발지원으로 전환을 요청한 사실과 WFP와 NGO 상주사무소 철수 요청 사실 기술
- 동지심판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안전위원회 등 유사사법기구를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문제를 제기함.
- 경제난으로 인한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 저하 구체적으로 서술함.
-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5차례 북한당국과 서신교환을 시도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서신의 내용을 부정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특별 보고(9.27)

- 문타본 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 2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10개항을 권고함.
 - 인도적 국제기구의 북한 체류 허용
 - 여성과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질적 개선
 - 법집행 담당자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지원 요청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
 - 특별보고관 및 다른 기구의 방북 허용
 - 북한이 가입한 4개 인권 관련 협약에 따른 각종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초청 등

강경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부고등판무관 내정자, 북한인권문제 언급 (12.1)

-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고등판무관 내정자는 “북한인권문제도 국제사회의 행동양식인 글로벌스탠더드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지혜롭게 다룰 생각” 이라고 언급함(세계일보 보도).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6자회담과 북한인권 관련 입장 표명 (12.13)

- 일본에서의 연설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상에서 납북자와 북한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개선안 발표(12.18)

- 문타본 보고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개선 6개안’을 발표함.
 - 남북 당국의 이산가족과 6·25 실종자 문제 해결
 -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 모니터링 등 대북 권리 향상
 - 탈북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 북한당국의 효과적인 인권조약 이행
 - 인권기구들의 방북 허용
 -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 촉구

제61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12.19)

- 2005년에 이어 금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도 찬성 99표, 반대 21표, 기권 56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음.
 - 한국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찬성
- 4대 인권규약 가입당사자로서 국가보고서 제출 등 인권 분야 국제협력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중 특히 북한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난민들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우려에 주목하면서,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제기함.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우려 표명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기술협력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사실

에 대해 우려 표명

-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확인하기 위해 인도지원 단체들의 북한 상주 보장 촉구

● 제62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함.

3. NGO

제4차 북한인권 국제대회(7.12)

●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워싱턴(제1차), 서울(제2차), 브뤼셀(제3차)에 이어 이태리 로마에서 유엔의 자문지위를 부여받은 비정부기구인 초국적 급진당(Transnational Radical Party, TRP)과 공동으로 제4차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함.

- 북한 내 고문과 처형,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 집중 토론

● 폐막 선언문에서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는 북한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국제형법재판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유엔안보리에 건의 하라고 강력히 촉구함.

5개 국제인권단체,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북한인권문제 청원(9.14)

● 휴먼라이츠워치, 국제난민기구, 영국 국제반노예연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등 5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앞으로 연대 청원을 제출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함.

일본 TV, 공개총살 동영상 방영(9.20)

● 일본 아사히TV는 2006년 7월 10일 함주군 주의천 인근에서 옥수수 10kg을 훔치다 살인을 저지른 편직공장 여성 노동자 유분희에 대해 집행된 공개총살 동영상을 방영함.

대한변호사협회, 『2006 북한인권백서』 발표(9.30)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는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200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를 작성·발간함.
- 다음과 같이 구체적 인권 실태로 대별하여 실태를 기술하고 있음.
 - 수사과정,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재판절차 등 인권 관련 법률의 적용실태
 -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 상의 현안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정치범수용소
 - 탈북자, 북송 재일교포,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보고서 발표(10.3)

-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이 북한 전체상황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국제적 노동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
-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유해 아동노동 금지 등의 영역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문제점 지적
-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라 남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불하도록 허락하라고 북한당국에 요구함.
 -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성공단 노동법 개정 촉구
 -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고,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촉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을 권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남한은 한국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 기업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 필요

뮤지컬 요덕스토리 미국 공연

- 함경남도 요덕군 제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내용

으로 구성된 요덕스토리(감독 정성산)가 미국에서 공연됨.

- 워싱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회
- 뉴욕: 10월 11일부터 2회
- 로스앤젤레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6회

9개국 11개 인권단체,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인권 개선 적극 노력 연대청원(10.19)

- 노르웨이 라프트인권재단, 북한인권시민연합, 디펜스포럼, 국제기독교연대 등 9개국 11개 인권단체들은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연대청원서를 발송함.
 -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상황과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국제평화와 인권보호의 수장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청원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탈북자 관련 보고서 발표(10.26)

- 국제위기그룹은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라는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 중국에서의 상황, 제3국 정착과정 등을 기술하고 관련 당사국에 대해 정책권고를 제시함.
- 배출요인으로서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정치적 억압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기회의 결여가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함.
 - 유인 동기로서 중국과 한국 내 가족의 존재를 거론
 - 밀반입된 남한 비디오, 미국과 한국의 라디오 방송, 구전 등을 통해 정보의 점진적 확산
- 대부분 공식적 망명을 추구할 의도로 탈북하지는 않지만 중국 내 체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제3국 정착을 희망함.
 - 언어, 문화, 가족 재결합 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남한에 재정착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북한인권 개선을 강하게 제기하지만 실제로 소수

의 탈북자 정착만 허용

- 관련 정부에 대해 정책을 권고함.
 - 북한: 중국 여행 정책 완화, 허가 없는 중국 방문 처벌 재검토, 개혁과 개방의 확대, 탈북자 문제와 남북관계 연계 해제
 - 중국: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임시 거류증 부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 및 접근 허용,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이 낳은 아동의 취학 허용 등
 - 베트남, 버마, 라오스: 탈북자 송환 중지
 -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 강제송환 원칙 준수 촉구, 정치적 망명을 위한 국내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조
 - 남한: 제3국 체류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절차 마련, 탈북자 망명 지원활동으로 중국에서 체포된 남한활동가의 석방 적극 추진 등

미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인권보고서 발표(10.30)

-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DLA Piper사와 공동으로 엘리 위젤(Elie Wiesel) 노벨평화상 수상자, 바실레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 켈 마그네 본데빅(Kjell Magne Bondevik) 노르웨이 전 총리 명의로 'Failure to Prot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라는 제목의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북한 정부는 식량난과 기근은 물론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며 자국민들에 대해 반인륜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함.
 - 북한 정부는 기아에 이르게 하는 식량정책, 정치범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인륜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
 - 북한은 마약 거래, 전염병 확산 방지실패, 대량의 난민탈출로 이어지는 중대한 인권유린 및 환경 파괴 등 평화에 대한 비전통적인 위협국임.
- 북한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정당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를 제시함.

- 첫째, 북한 정부는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
- 둘째, 북한 상황은 평화에 대한 비전통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
-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6장과 과거 안보리 선례 조치에 따라 북한 상황과 관련해 비징벌적인(non-punitive)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촉구함.
 - 유엔안보리의 개입에 대한 중요한 이유 개괄
 - 유엔 및 국제기관들이 취약계층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북한 정부에 대해 촉구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정치범 석방 촉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요구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북한을 ‘인터넷 적국’으로 규정(11.6)

-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중국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을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을 규제하는 ‘인터넷 적국’으로 규정함(AFP 통신 보도).
- 북한에 대해 언론자유 최하위국으로 분류함(10.24).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11.24)

-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인권 관심사(North Korea: Human Rights Concerns)’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술함.
 - 고문과 감옥 내 부당 대우: 고문, 극형 지속, 북송 여성 임신부에 대한 박해, 즉결처형과 장기간의 강제노동 지속 등
 - 공개처형: 2003년 공개처형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2005년에도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공개처형
 - 난민: 1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송환 지속
 - 악화되는 식량사정
 -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제약 지속

- 인권정보에 대한 제약과 아동 영양 상태 열악 등

미 인권단체들, 탈북자 송환 항의 집회(12.2)

- '북한자유연대' 주도로 14개국 20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규탄 시위 전개
 - 강제송환 지속에 항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캠페인 전개

미 북한인권위원회, 탈북자 관련 보고서 발표(12.7)

-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인권문제로서의 북한난민 문제, 중국 내 북한 난민, 중국 차원에서의 북한 난민, 남한 내 북한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탈북자의 유동이 북한 내 인권유린에서 발생, 탈북자 문제가 인권문제 야기, 국제공동체의 의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볼 때 탈북자를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1,346여명에 달하는 탈북자 조사 주요 결과
 -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답변
 - 한국행 희망 64%, 미국행 희망 19%, 중국 체류 희망 14%
 - 탈북동기와 관련 경제적 이유 95%, 정치적 불만이나 박해 4%
 - 중국체류 기간과 관련 3년 이상 체류 68%
 - 북한 내 식량 취득원에 대해 정부배급에만 의존 3%, 정부 배급과 개인노력 18%, 시장 62%
 -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67%가 지난 2년 동안 식량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 등

4. 분석 및 평가

미사일·핵문제 등 안보 이슈의 부각과 북한인권문제

-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개별국가들은 안보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는 상대적으로 약화됨.
-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 거론 필요성 제기함.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6자회담의 목표 중 하나로 인권문제 포함 거론
 -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 포괄적 제기 방안 모색 제기

인도적 위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론 집중 부각

-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되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사실에 대해 부각됨.
-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정적 태도가 집중적으로 부각됨.
 - 대북 지원 식량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 협조 촉구
 -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인도지원 단체들의 활동 제약에 우려 표명
 -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분배 확인을 위해 인도지원 단체들의 북한 상주 보장 촉구
 - 기아에 이르게 하는 북한정부의 식량 정책 제기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 지속 촉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함.
 - 문타본 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은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

부하면서 보고관의 존재 불인정 지속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기술 협력 등 유엔인권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촉구함.
 - 북한당국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기술협력 마저 거부하는 태도 지속

안보리 등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 개입 강화 촉구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됨.
 - 제4차 북한인권국제대회 폐막 선언문에서 제기
 -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등의 요청으로 미북한인권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비징벌적 결의안 채택 등 유엔 안보리의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촉구
 - 휴먼라이츠워치, 국제난민기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제비정부기구들이 안보리의 개입 연대 청원
- 디펜스포럼, 라프트인권재단,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제비정부기구들이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촉구 연대 청원

헬싱키 협약 원용, 북한인권 개선 논의 전개

- 북한인권법, 민주주의증진법 등에서 헬싱키 협약을 동북아 지역에 원용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미국 내 인권단체, 의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함.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노동권 부각

-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의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다 강화됨.
 - 휴먼라이츠워치는 특별보고서 발간을 통해 개성공단 노동법 개정, 국제노동기구 및 핵심 조약 가입 등을 촉구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휴먼라이츠 보고서 등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됨.
- 특히 개성공단의 이익금의 지도부 자금줄 등을 거론하며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유보 제기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 실태에 대한 관심 지속

-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근로자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 유럽의회는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 실태 조사 움직임

국내외 비정부인권기구들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 보고서 발간 확대

- 국내외 비정부인권기구들이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전문적인 보고서들의 작성 및 발간을 확대하여 오고 있음.
 - 대한변협, 『2006 북한인권백서』
 -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권』
 - 미 북한인권위원회, 『Failure to Protect』
 -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관심사』
- 국제비정부기구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 등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기술하는 전문 보고서를 발간함.
 - 미 북한인권위원회, 『탈북자의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
 - 국제위기그룹, 『Perilous Journeys』

한국 정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 한국 정부는 제61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표결함.
 -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불참
 - 2004년 제60차, 2005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1. 미국에 대한 반응	21
2. 일본에 대한 반응	26
3. 유엔에 대한 반응	32
4. 남한에 대한 반응	33
5. 분석 및 평가	39

1. 미국에 대한 반응

미국의 ‘반테로전’ 과 인권유린 행위 규탄 지속, 강화

■ 이라크 주둔 미군병사들의 민간인 “살인 만행”

- “여러 외신들에 의해 지난 해 11월 이라크 서부 하디싸시에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한 24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이 사건은 이라크 주둔 “미 해병대원들이 감행한 살인 만행”으로 드러남(로동신문, 7.12).
 -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의사가 “여러 구의 시체에서 미 해병대가 장비한 <M-4>카빈총의 총알이 발견”되었는바, 따라서 이는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증언
- 2006년 3월 바그다드 남부지역에서 여러 명의 미군병사들이 이라크 여성을 운간하고 친척 3명과 함께 살해함(로동신문, 7.17).
- 관련 언론 보도에 있어 특징적인 경향은 주로 이라크 주둔 미군병사들에 의한 이라크 여성 운간 및 어린이와 여성 학살 사건을 부각시켜 미군의 “살인 만행”을 규탄, 비난함.

■ 미국의 “전쟁범죄법” 개정(로동신문, 8.23)

- 미 행정부는 “<전쟁범죄법> 개정을 통해 미군의 인권유린 행위를 <전쟁범죄법>의 소추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 함.
 - 이는 미군이 수감자들에 대해 더욱 야만적인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할 수 있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바, “전시의 포로나 문민의 보호문제를 규정한 제네바조약 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며 세계량심에 대한 우롱”
 - 법 개정은 미국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인권유린자”라는 것을 입증

■ 미국 대통령 부시, “해외 비밀감옥 운영 사실” 공식 인정

- 2006년 9월 6일 미국 대통령 부시가 방송연설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의 해외비

밀감옥 운영사실을 정식 인정함.

- “미국 집권자”가 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로동신문, 9.24)

■ 미국의 “《테로협약자》 취급 관련 《법》” 채택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침해 행위(로동신문, 10.26)

● 미국의 “《테로협약자》 취급 관련 《법》”은 미군의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하고 더욱 조장시키는 범죄문서임.

- “《테로협약자》 취급 관련 《법》” 채택은 미제가 앞으로 국제법이나 국제 여론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제 마음대로 인권유린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

● 세계여론은 법 채택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인권유린 범죄로 강하게 규탄”함.

● 국제인권단체들, 미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부시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시민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함(로동신문, 11.8).

- 법안 서명 후 미국 부통령 체니는 “《테로협약자》들을 물속에 처박는 정도의 고문은 필요한 방법으로 된다”고 발언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비난 고조

■ 유엔위원회,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 단죄 및 오만함 규탄, 경고

● 2006년 7월 28일,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정형을 감시하는 유엔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를 단죄함.

- 미국이 《반테로》의 간판 밑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외 감옥들에 비법적으로 무기한 감금, 고문과 학대행위를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들어 폭로(민주조선, 8.2)

●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정형을 감시하는 유엔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대표단의 불손한 행동으로 청문회 참가자들이 격분함.

- “관파나모 미 해군기지 감옥을 비롯한 해외 감옥들에서 감행되고 있는 수감

- 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행위”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생억지”(로동신문, 8.3)
- 유엔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기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미국의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고 “계속 그렇게 처신하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경고”

■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 미 중앙정보국의 해외 비밀감옥 운영 규탄

- 미국의 해외 비밀감옥 운영을 “국제법과 민주주의를 란폭하게 짓밟는 비법적이며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반미열풍이 고조되고 있음(로동신문, 9.24).

■ “제14차 뿔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미국의 전횡과 강권행위의 부당성, 범죄성 폭로, 단죄(로동신문, 9.26)

- “현 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되는 위협은 이른바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특히 《인권옹호》, 《자유》,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감행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자주권 유린, 인간살륙행위”라고 단죄함.
- 최종 채택 문건은 “미국의 전횡과 강권행위의 부당성과 범죄성을 폭로 단죄하는 고발장”으로 됨.

■ 이라크 주둔 미군병사들의 “살인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비난 고조

- 최근 “이라크의 여러 곳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이 공개되어 국제사회계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로동신문, 7.12).
 - 6월, 영국 BBC방송이 “3월 중순 이사키시에서 12명의 민간인들이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광경”을 촬영한 녹화물 방영
 - 4월 26일, 미국 AP통신이 8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바그다드의 서부지역에서 무고한 주민을 납치, 살해한 것을 폭로
 - 이라크전 참전 미군병사는 민간인 학살 은폐 관련 교육을 받았음을 증언

- 미국 주재 이라크대사는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사촌동생을 포함한 3명의 청년들이 하디싸시에서 미군에 의해 총살당한 사실 폭로

미국의 인권실태 폭로, 비난

▣ “미국식 《민주주의》”하에서는 인권 보장 불가(로동신문, 9.7)

- 미국식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바, “미국에서는 인권이 무참하게, 란폭하게 유린 침해당하고” 있음.
 - “미국의 한 재판소가 《령장없는 도청》이 완전히 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현실적으로 미국당국은 비법적으로 비밀도청을 감행
 - 미국대통령 부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불편스러운 심기는 드러내 보이면서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혀져야 한다》”고 하며 “미행정부가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할 것이라고 강짜”
- “법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말짱히 파헤쳐도 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며 “오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폭력정치에 짓밟혀 서럽게 울고” 있음.

▣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 인권유린 행위 폭로, 비난

-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중동계 이주민들이 정보기관들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로동신문, 9.22).
 - 부시행정부는 “《반테로전》의 명분으로 중동출신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바, 이는 “이주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차별정책, 인권유린 행위”

▣ 미국에서 인종주의적 폭력행위 성행

- 미국에서 인종주의적 폭력행위가 계속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급격히 증대함.

-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지난해(2005)에 그와 같은 행위가 공식 적발된 것만도 1,972 건에 달하였다고 밝힘(로동신문, 9.24).

미국이 유엔에서 “독단과 전횡”으로 유엔 무력화

■ 미국의 “독단과 전횡”으로 유엔 무력화

- 미국은 국제기구들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국제문제 처리와 유엔활동을 “저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할 것을 강박”함으로써 많은 국제문제들이 유엔현장과 유엔회원국들의 요구와는 배치되게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음(로동신문, 9.5).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에 대하여 미국이 취한 입장과 태도에서 입증

■ 미국, 유엔의 “인종주의,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 반대(로동신문, 12.4)

- 미국, “유엔총회 제61차 회의 3위원회에 제출된 인종주의,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함.
 - 이는 미국이 “인권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불순한 목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미국의 “《반테로전》은 《테로와의 투쟁》이라는 허울좋은 구실 밑에 감행되는 자주권 침해, 인권유린 행위”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침략은 란폭한 국가테로, 인권유린 행위”

2. 일본에 대한 반응

일본인 납치 피해자 관련 일본 비난

■ 일본당국의 “요코다 메구미 가짜유골설”(조선일보, 7.14)

- 평양 방문(2004.11) 일본정부 대표단이 “사망자문제는 90% 해결”되었다고 밝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유골설》까지 꾸며낸 일본의 배반행위는 조일관계를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한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였음.
- 일본당국은 납치문제 관련 사실 전모를 납득 수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일본당국이 주장하는 피해자 생존 설은 뚜렷한 물증이 없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진상 규명의 과녁은 조선측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야 한다”
-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회담 담당대사가 메구미의 유골에 대한 “감정 결과 날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주장(7.7)

■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 촉구에 대해 과거청산문제 제기

- 일본 외무성 인권담당대사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와 관련해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 제기로 맞대응함(연합뉴스, 9.27).
 -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우리 공화국이 압살되면 이 문제도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헛되이 타산”
 - “납치문제는 이미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고 “조·일사이에 미결건이 있다면 그것은 840만 납치, 100만 대학살, 20만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범죄 청산문제”인바, 일본은 납치문제를 가지고 불순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 과거범죄를 은폐하려 하지 말라고 대응

■ 일본 새 내각의 “《랍치문제》 극대화”(로동신문, 10.30)

- 일본의 새 내각이 “《랍치문제대책본부》 조직을 서두르고 그 첫 회의에서 우리에게 대한 《압력》을 공공연히 정책화” 하였는바, 이는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친미사환군들의 너절하고 추악한 행위”임.
- 일본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랍치문제》는 최대의 정치적 자산이며 이를 리용한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은 생존 그 자체”임.
 - 일본당국자들은 핵문제를 걸고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랍치문제》를 더욱 떠들어대고” 있음.

■ 일본의 “《랍치문제》 국제화”는 과거청산 회피 의도(로동신문, 10.25)

- 일본이 “《랍치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국제화”하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랍치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안임.
 - 일본이 납치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일본이 저지를 엄청난 죄악을 《랍치문제》라는 방패로 가리우고 그 청산을 회피하자는 것”

■ 메구미의 전 남편 김영남 기자회견 상세 보도

- 일본의 기자들을 초청, 관련 현장 취재 및 김영남 기자회견을 통해 메구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함.
 - ‘조선신보’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김영남 기자회견(7.6)의 전체 내용과 그 과정을 5회에 걸쳐 연재

총련에 대한 “적대행위” 규탄 지속, 강화

■ 총련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압박 강화

- 요코하마 시 당국이 10여개 총련 관련 시설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취소를 발표한 데 이어 각지에서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음(로동신문, 7.29).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제가 더함에 따라 일본이 “《추가제재》까지 운운”하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재와 운명을 위협함.

- 총련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 실시해오던 세금감면조치 취소 사태가 일본당국의 배후 조종 밑에 여기저기서 빚어지고 있는바, 이는 총련이 “《북조선과 일체화된 조직》이라는 것이 그 주되는 《리유》”(조선신보, 11.8)

■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폭행 심화

- 특히 나이 어린 동포학생들이 테러의 주 대상인바, 이들에 대한 “협박, 폭행 건수는 7월 중순의 며칠 사이에만 하여도 110여 건”에 달함(로동신문, 7.29).

- 7월 5일 이후 10월 말 현재,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사건은 169건(조선신보, 11.15)

■ 총련에 대한 “적대행위”와 관련, 국제기구에 재발방지 요청

- 총련중앙, 여성동맹, 동경중고 교원, 학생대표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동경 사무소와 일본 적십자사 사무국 방문(11.1), “적대행위” 재발방지 및 ‘만경봉-92호’ 운항재개 협력을 요청함(조선신보, 11.8).

- 총련중앙, 여성동맹, 인권협회, 동경조고 교원, 학생대표들 7명이 동경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 일본지부 사무소 방문(11.2), “인도목적의 《만경봉-92》호” 운항재개, 재일조선학생의 안전보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과 부당한 규제 시정, 경제활동과 생활권 보장 등을 요청함(조선신보, 11.8).

■ 일본국회 앞 규탄 시위 및 일본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 삐라 살포

- ‘만경봉-92호’ 입항금지 반대, 학생들에 대한 박해, 총련 조직에 대한 파괴테러 행위 등을 폭로 규탄, “동포들과 새 세대 단체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온종일 앉아 버티기와 가두시위 진행”함(조선신보, 11.15).

- 총련 북해도 본부, 경도부본부 등 여러 지방 본부들에서 시위행동이 벌어짐(조선신보, 11.17).

- “《약사법 위반》 명목으로 총련조직과 동포녀성의 자택 등 7개소”를 강제수색(11.27)한 일본당국의 책동을 규탄, 비난하는 가두시위가 벌어짐(조선신보, 12.8).

■ ‘조선중앙통신’의 “일본반동들의 반총련 책동” 규탄(민주조선, 11.23)

- 일본은 도의적 및 국제법,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활상 편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림.
 - 국제사회는 “일본반동들”의 국제적 범죄행위를 문제시하고 심판해야 함.

■ 범민련 남측본부, “일본의 재일동포 탄압 책동” 규탄 성명 발표

- 범민련 남측본부, “《일본은 파렴치한 재일동포 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12.1)함(민주조선, 12.7).
 - 일본이 “최대의 인권탄압 행위”인 인종차별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편승, “호전적이고 반복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여 군국주의 우경화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
 - 일본의 탄압 책동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

■ 남측 불교계, “일본의 총련 탄압 중지 촉구” 성명 발표

- 남한의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교여성회를 비롯한 28개 불교단체 대표들이 “《일본은 총련단체에 대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11.28)함(민주조선, 12.3/조선신보, 12.11).
 - 일본경찰의 총련 조직 수색은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인바, 일본 정부는 총련탄압과 관련해 “전체 8,000만 민족”에게 참회, 반성

“만경봉-92호” 입항금지 규탄, 비난

- 일본당국이 “인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만경봉-92호’의 운항을 가로막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임(조선신보, 7.28).

- 만경봉-92호의 운항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의 제반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11.17)를 통해 ‘만경봉-92호’ 정상운항 재개를 요구함.
 - “조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걸핏하면 ≪만경봉-92≫호를 걸고들며 정상운항을 휘방하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고약하고 상투적인 습질”

유골문제 집회참가 북측 유가족들의 입국 거부 규탄, 비난

- “조선인 강제 련행 피해자들의 유골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평화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북남조선에서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일본정부가 북측 유가족들의 입국을 거부함(조선신보, 7.28).
 - 총련 중앙 고덕우 부의장, 이는 “해방 후 처음인 폭거이며 세계적으로도 류레 없는 비인도적 행위,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입국 인정 요구
 - “조선인 강제련행 진상조사단”, 이 문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통보
- 북한의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일본 당국의 입국차단 규탄 성명을 발표함(7.28).
- “일본반동들의 행위야말로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악랄한 침해이며 나아가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로동신문, 7.29)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전쟁 책동 규탄 성명 발표 (7.23)

-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인권침해로 되는 제재조치를 그만두며 재일조선인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민주조선, 8.18).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일본에서의 인권유린 행위 폭로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9.18)하여 일본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폭로함(로동신문, 9.22).
 - 특히 일본에서 아직도 민족적 및 인종적 차별이 뿌리깊이 남아있는 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들어 폭로하고, 이는 일본의 편견적 역사인식과 관련된다고 비난
 - 보고서는 “국제공동체가 일본에서 이웃 아시아나라들과의 관계문제를 가지고 그릇된 역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일본 유엔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반대, 비난

- 일본은 유엔총회 제61차 회의 3위원회에 제출된 “인종주의,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에 미국과 함께 반대함(로동신문, 12.5).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한 일본 규탄(10.9)

- 제61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일본을 규탄함.
- 북한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일본의 여성인권 유린을 규탄, 비난함.
 - 중군위안부 관련 유엔 권고 불이행,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실태, 고위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녀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과거범죄 자체를 역사의 흑막 속에 묻어 버리려는 일본의 태도”를 규탄하고 “이것이 바로 녀성인권에 대한 일본의 태도”라고 비난(로동신문, 10.20)

3. 유엔에 대한 반응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만행”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무능함 비판

- “유엔안보리가 미국에 눌리워 이스라엘의 잔악한 살인만행을 문제시하는 말 한마디도 변변히 하지 못하는 무능한 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제사회계에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함(로동신문, 8.5).
 - “유엔안보리사회는 국제평화 수호에서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마땅히 공정한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규탄하여야 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특별보고서’ 배경, 비난

▣ 북한인권 특별보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북한인권 특별보고’ 회의(9.27)에서 비릿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가 끝난 후 북한대표가 특별보고서의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연합뉴스, 9.27).
 -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특별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하며, “그것들이 인권분야에서 금물인 정치·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최 참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정치·전략적 목적에 인권이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현 시기 우리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인권의 미명하에 남의 제도를 해치려는 의세와 자기를 지키려는 주인 사이의 대결이 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발전도상나라들만 문제시되고 미국의 비법적인 이라크 침공과 민간인 살육, 서방에 만연된 인간중요 사상과 인종차별, 타민족 배타주의 등 엄중한 인권유린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오늘 인권이사회의 현실”이라고 비판

유엔 총회 채택(11.18), ‘대북인권결의안’ “전적으로 거부”

- 김창국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이 민주주의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

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연합뉴스, 11.18).

- “제3위원회의 인권결의안이 존중받으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인권유린을 먼저 풀어야 한다.”
- “최악의 인권침해국인 미국과 일본, 서방국가들”에 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위성국가들이 “북한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음모의 산물”

- 김 차석대사는 특히 일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함.
 -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와 재침략 야욕”으로 북한인권법안과 제재법 등을 만들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으며 일본은 북한 인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연합뉴스, 11.18)
- ‘대북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와 정보조작의 산물로서 단호히 배격”함(조선중앙통신사, 11.22).
 - “이 사기문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흔히 써먹는 수법 그대로 반공화국인간 추물들을 주물러 조작해낸 허위정보자료들을 감히 《진실》로 둔갑”
 - ‘대북인권결의안’은 “랭전시기의 반쏘반사회주의 《인권외교》를 되살려 존엄 있는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그 어떤 《변혁》에도 유도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으나 “아무런 합법성도 신빙성도 없는 《인권결의》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

4. 남한에 대한 반응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최성익 부위원장이 밝힌 “북남인도주의 사업” 추진방향(조선신보, 7.10)

■ 제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의 인원 규모 확대는 북측의 제안

- 제14차 특별상봉사업의 규모 확대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이 주동적으로 제안한 것임.

-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적십자단체는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는 의사를 과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부각은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동조하는 행위

-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행불자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갈 데 대한 문제 등을 추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 이 합의에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는 이른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라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
- 북측의 입장에서 국군포로문제를 따진다면 “정전협정 체결 당시 8만3천 여명이나 되는 인민군 군인들을 《반공포로》의 미명하에 강제 석방시켜서 남쪽지역에 억류한 바로 그 문제부터 따져야”함.
 - “《납북자》와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측에도 할 말이 있다”
 - 이산가족 발생 관련 역사적 경위들을 외면하고 “이른바 《국군포로》, 《납북자》의 문제를 무작정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납북자 김영남 가족의 재상봉 및 가정방문 실현 가능

- 김영남이 상봉기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측가족과의 재상봉 약속은 실현 가능함.
 - “본인들이 밝힌 것이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흩어진 가족들의 소망을 풀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측에서 오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 남측가족의 김영남 가정방문도 실현 가능함.
 -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이니 그대로 실현”
 - “북측 적십자는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보장해 나가자는 입장”

■ 금강산 면회소 건설의 주요 장애는 남측에서 비롯

- 원래 금강산 면회소 건설문제는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과 합의한 것이나 “남측에서 김윤규 사장과 측근들을 제거”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면회소와 관련한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제6차 북남적십자회담(05년8월)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함.
 - 쌍방 사이의 최종설계 교환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북측은 설계안을 아직도 남측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밝힘.
- 남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건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밀고 나갈 수 없음.
 - “지금과 같은 상황”이란 남측이 “제3국에 난민수용소를 만들어서 이른바 《탈북자 사건》을 일으켜 련발로 새로운 흠어진 가족을 만들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도주의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풀이 되는 조건에서는 금강산 면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

■ 이산가족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있어 관건은 남측의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

-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외세에 의한 분렬로 인해서 산생된 문제이며 조국통일이 되어야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조국통일을 최고의 인도주의”라고 함.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리롭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구
- 이산가족문제는 남북관계와의 연계 속에서 해결을 모색함.
 - “인도주의문제는 정치와 별도로 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원리”이지만 “남측에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사업이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은 “내외에 공인된 주권국가이며 남측 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6.15 공동선언도 이를 바탕으로 나왔는데” 남측의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가로막고 있다.”
-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는 “《보안법》문제를 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응당”함.

- 인도주의사업의 제도화, 이산가족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이 중요

이산가족 상봉사업 중단 통보(7.19)

-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에게 보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에서 북한은 8월 15일로 예정된 특별화상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중단할 것임을 통보함.
 - 남측이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2006.7.11-13, 부산)에서 북측의 추석을 계기로 한 금강산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실현 제안을 외면, 토의조차 회피
 -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쌀, 비료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
 - 이는 “최근 우리를 적대시 하면서 반공화국 제재 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 있는 미국, 일본에 동족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

남한 “극우보수세력”의 남북자 문제 제기는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모략소동” (로동신문, 9.5)

- 최근 남한에서 “극우보수세력”이 “《6.25전쟁 때의 랍북자 실태》라는 이른바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바, “그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략과 중상,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자료들이 려거” 됨.
 - 이는 “력사를 외곡하고 사실을 전도하는 완전한 날조품이며 그것은 우리를 심히 중상 모독하는 용납 못할 반공화국 대결 책동의 산물”
- 북한에는 “애당초 《랍북자》”가 존재 하지 않음.
 -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이 떠드는 《6.25랍북자》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싸우기 위해 자원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했던 사람들”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쇼 통치가 살판치는 남조선에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북으로 용약 들어온 사람들”

- 의용군 자원입대자들과 의거 입북자들 가운데는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할 일념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 바친 것으로 하여” 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수, 박사 등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최근년간에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하여 남한의 가족·친척이 인정하고 감탄
-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진짜 랍치 피해자들은 남조선사람들이 아니라 미제가 원자탄 공갈 등으로 남으로 강제로 유인 랍치해 간 우리 북의 동포들”임.
 - “남조선적십자사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수는 무려 45만 여명에 달하며 그들은 인권의 불모지인 남조선에서 갖은 박해와 고통을 다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있지도 않는 《랍북자》 문제를 떠드느라고 공연한 헛수고를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우리 북의 동포들을 남으로 강제로 끌고 간 이들의 범죄적인 유인랍치행위에 대한 진상부터 조사공개하고 사죄해야 할 것”임.

‘조평통 대변인’, 남한당국의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관련 성명 발표 (중앙·평양방송, 11.18)

- “남조선당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여 반공화국제재압력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려는 미국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반민족적인 도발행위이며 6.15공동선언의 기초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뒤집어엎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책동”임.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손을 들어주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노골적으로 편승해 나선 남조선 당국을 꿰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안고 준열히 단죄 규탄”함.
- “남조선 당국은 이미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력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동족 사이의 인도적 사업마저 외세에 팔아먹었고 집단적 제재에도 가담함으로써 북남관계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함.
 -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동조해 나선 남조선 당국의 이번 책동은 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범죄에 죄악을 덧쌓는 것”

-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하여 초래 될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

남한당국의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민심 역행 행위

-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는 남조선인민들도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력 책동의 부당성을 폭로하면서 당국이 그에 편승하여 북남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은 이러한 민심에 역행”함.
 - “남조선당국이 최근 미국이 유엔에서 벌린 이른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놀음에 참가하여 찬성한 것은 그 집중적 표현”(민주조선, 11.22)
- “《한총련》의장 장송희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로골적으로 편승해 나선 남조선 당국을 규탄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함(로동신문, 11.24).
 - “현 《정부》가 북과의 관계개선의 기회를 빈번히 저버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계속 동조한다면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
- “20일 남조선의 기자협회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로동신문, 11.28).
 - “미국이 《대북인권결의안》을 유엔에 끌고 간 것은 북을 기어이 압살하겠다는 끈질긴 침략야망의 발로라고 규탄”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남조선 당국의 행위야말로 대세의 흐름 하나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망동이라고 단죄”
 - “미국이 북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5. 분석 및 평가

미국을 겨냥한 비판적 대응 지속, 강화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와 관련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겨냥한 비판적 대응이 지속, 강화되는 추세임.
 -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인권침해는 “미국의 대조선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감행되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제재와 봉쇄책동의 한 고리
 - “인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간섭수단으로 세계제패 야망 실현의 중요한 공간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부당한 정책은 반드시 저지”(민주조선, 9.5)
 -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인권옹호》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감행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작전”(로동신문, 9.6)
 -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대북인권압박은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의 전형으로서 비정상적인 처사”
 -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세계제패의 만능수단으로 악용
 - 대북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문건”(로동신문, 11.21)
- 미국의 “독단과 전횡”으로 유엔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규탄, 비난함.
 -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발동(민주조선, 11.28)

“인권유린국” 미국과 일본의 인권문제 공론화 촉구 지속, 강화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의 “반테로전”과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 비난함.
 - 프랑스 신문 “《몽드》”가 “《반테로》의 명목 밑에 감행된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민주조선, 10.1)
- 중국이 인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함.

-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무성 대변인이 《세계 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난한 것”과 관련, “중국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할 자격이 없다”고 답함(민주조선, 12.17).

-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 인권유린 행위 등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 규탄함.
-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규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함.

유엔과 남한에 대해 비판적·적극적 대응

- 상반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인권문제 제기와 관련해 유엔과 남한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비판적·적극적으로 대응함.
- 유엔 비판
 -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 수호의 사명과 책임 수행을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살인 만행을 규탄”해야 하는데 “미국에 눌리워 이스라엘의 잔악한 살인 만행을 문제시하는 말 한 마디도 변변히 하지 못하는 무능한 기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제사회계에 실망을 안겨주었다”(로동신문, 8.5)
 - “발전도상나라들만 문제시되고 미국의 비법적인 이라크 침공과 민간인 살육, 서방에 만연된 인간중요 사상과 인종차별, 타민족 배타주의 등 엄중한 인권유린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오늘 인권이사회의 현실”
 - “유엔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놀음”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해보려는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산물”(로동신문, 11.21)
- 남한 비판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부각은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동조하는 행위
 - 주로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으로 “미 국회에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조작된 《북인권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미국의 추동으로 유엔에 《북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이 상정되었을 때에도 미국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 것도 바로 《한나라당》 패거리들”(민주조선, 8.2)

대미 비난의 모순 노정

-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을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 인권 관련 NGO들의 미국 인권 상황 폭로, 규탄 기사들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대미 비난의 모순을 드러냄.
 - “《뉴욕 타임스》 19일부가 이스라엘이 사용한 송이폭탄은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법적인 무기라고 하면서 신문은 그 무기가 다름 아닌 미국회사들이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이스라엘에 넘겨준 것이라고 지적”(민주조선, 8.30)

총련 및 재일동포 인권 관련 일본당국 규탄 지속, 강화

- “일본반동들”의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 박해”는 인권침해임(로동신문, 7.29).
-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4일 논평을 발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함(민주조선, 8.11).
- 일본당국의 총련 및 재일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추종행위인바, “《민족주의자》의 탈을 쓴” 일본은 “대미추종의 시녀, 친미사대주의자”임(로동신문, 10.30).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 미국의 대북인권압박 및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약화 유도

-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을 가자지대에 파견,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함(민주조선, 7.9).
- 레바논 사태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2차 특별회의에서 북한대표 연설(8.11)
 - “이스라엘의 침공과 민간인 학살은 유엔헌장과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전쟁범죄이고 반인륜적 범죄”
 -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인권유린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의 비호두둔과 물심양면의 지원이 작

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나라들”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사태 관련 담화’ 발표(8.17)
 - 8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레바논사태에 관한 특별회의를 소집,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과 민간인 대량학살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그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
 - “침략전쟁에 의한 주권침해와 민간인 대학살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최대의 인권유린 행위”
 -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민간인 대량살육전의 복사판인 레바논 사태의 주범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면하여 국제사회 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감행한 민간인 대량학살 만행을 긴급 특별의제로 취급하고 강력 규탄하는 조치들을 연이어 취한 것은 응당하고 다행스러운 일”
-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송이폭탄을 대량 투하”함으로써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학살 만행은 명백히 집단학살의 성원들을 죽이는 것을 집단학살행위로 규제한 1948년의 《집단학살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해당되는 집단학살범죄행위로서 인류사에 보기 드문 특대형 인권범죄” (로동신문, 9.6)임.
 - “《인권옹호》의 막 뒤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가 묵인된다면 세계는 무법천지로 되게 될 것”
- “이스라엘의 송이폭탄 사용은 미제가 대리인을 내세워 감행한 극악한 살인만행, 인권유린 범죄행위”인바, “미제와 이스라엘을 국제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여 엄정히 징벌”(로동신문, 11.22)

이산가족 상봉 관련 언론 보도의 정치색 지속, 보도 내용 변화

- 제14차 이산가족 대면상봉(6.19~30) 관련 언론 보도에서도 가족 상봉의 의의보

다는 상봉자들의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대단합, 나라의 통일” 등 정치적 발언을 강조함.

- “우리측 상봉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두가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남녘의 혈육들에게 말하였다.”(민주조선, 7.1)
-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온 겨레의 마음과 힘을 합쳐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절절하게 말하였다.”(민주조선, 7.1)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신문보도에 있어 상반기에 비해 지면 할애를 많이 한 편이며 내용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룸.

- 제14차 이산가족 대면상봉과 관련해 특히 남북자 김영남의 가족상봉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민주조선, 7.1)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최성익 부위원장의 “북남인도주의 사업” 추진방향 관련 기사에서는 (조선신보, 7.10)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남북자 김영남 가족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 문제 등 이산가족문제 전반을 비교적 상세히 다룸.



인도주의 사안

III

- | | |
|---------------|----|
| 1. 탈북자 | 47 |
| 2. 납북자 · 국군포로 | 50 |
| 3. 이산가족 | 54 |
| 4. 분석 및 평가 | 55 |

1. 탈북자

미국, 한국국적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 승인(7.6)

- 미국 이민법원(L.A)은 한국에 정착했다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 (2005.7)한 탈북여성(33세)의 망명신청을 수용함.
 - 2001년 탈북이후 2002년 한국에 정착

탈북자지원 ‘불법월경조직죄’로 중국에 수감중인 최영훈 부인 호소(7.10)

- 2003년 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보트이용 탈북자 80여명 지원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 선고받고 4년째 웨이팡교도소에 수감 중임.
 - 주중대사관은 중국에게 인도적 차원의 조기석방 요청

미국, 북극적자 6명에게 추첨 통해 미국영주권 부여(7.18)

-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신청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출신 국민 5만-5만5천 명에게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7년 회계연도 대상자 중에 북한출신 6명이 포함됨.
 - 2005.10.5-12.4 영주권 추첨을 신청
 - 영주권 추첨당첨자는 고교졸업증명서와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가능

중국주재 미공관 진입 탈북자 미국행 성사(7.22)

-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하였다가 미국 총영사관으로 재이동한 탈북자 4명중 3명이 난민지위를 부여받아 미국으로 입국함.
 -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행 허용
 - 남성 1명은 과거 인권탄압관련 기관(북한국가보위부 소속으로 정치범수용소) 경력 때문에 미국행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짐.

태국경찰, 한인교회 보호 탈북자 집단연행(8.22)

- 태국 경찰은 방콕소재 한인교회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175명을 이민국수용소에 강제 연행하여 조사함.
 - 거동수상한 사람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로 태국한국대사관 근처 주택 급습하여 강제연행
 - 태국 이민국은 탈북자들이 제3국행을 원하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는 않을 것이며,
 - 불법입국자로 기소한 뒤 전원 추방절차를 밟을 것으로 밝힘.
 - 미국은 태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처리 관련, 차관보를 파견하여 태국과 양자협상을 추진하고 제3국으로 이동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
 - 연행자 이외에도 태국 이민국 수용소와 미 대사관 등에 90여명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미성년자(23명)를 제외한 탈북자들은 방콕 북부법원에서 불법입국죄로 각 6,000바트(약15만원)의 벌금형 혹은 30일 구류형 선고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16명 석방(8.24) 한국입국(8.25)
 - UNHCR 방콕사무소는 태국정부와의 탈북자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 미국행을 희망할 경우 미국대사관과 연결 적극 주선 의사 표명
 - 다만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태국이 '인간밀수'의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는데 심각한 우려 표명

탈북자 7명 태국경찰에 자진출두 난민지위 요구(9.18)

- 탈북자 7명이 태국 북부지방 농카이주 경찰에 자진출두 해 난민지위를 요구했으나, 거부되고 30일간 구류처분 결정됨.
 - 일본 '탈북자를 위한 보호기금(LFNKR)'은 탈북자를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고, 태국정부에 1951년 난민협약에 근거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촉구

중국, 북핵 실험 이후 국경철조망 설치(10.11)

- 중국이 핵실험이후 ‘탈북자들의 월경방지용’ 철조망을 신의주시 맞은 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동북쪽 교외 20Km 지점에 설치함.
 - 중국 인민해방군 1개 소대병력이 되어, 2.5m의 T자형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 뒤 가로로 철망형태로 강둑 맨 가장자리에 설치
 - 수심이 얇고 강폭이 좁은 곳에 집중 설치

태국, 한인교회 체류 탈북자 11명 강제연행(10.20)

- 태국 한인교회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19명 중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던 11명의 탈북자가 태국경찰에 강제 연행됨.

미국, 탈북청소년 3명 수용 방침

- 9월 초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미총영사관으로 진입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미국 정착을 허용할 방침임.

태국, 탈북자 76명에게 집행유예 선고(10.26)

- 태국 빠툼타니 지방법원은 집단 연행 탈북자 94명(10.24) 중 성인 76명에 대해 밀입국죄를 적용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함.
 - 교도소 수감 대신 이민국 수용소를 거쳐 제3국으로 추방절차를 거침.
 - 미성년 18명은 처벌 없이 부모와 함께 추방절차를 거침.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북한난민 위기’ 보고서 발간(10.26)

-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북한 핵 위기가 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탈북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함.
 - 한국, 중국, 태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탈북자 100여명을 면접하여 조사

국내입국 탈북자 이혼특례 조항 신설(12.22)

- 국회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기혼 단독 입국 탈북자의 국내 재결혼이 가능해 짐.
 - 북한의 배우자가 법원에 출속하지 않아도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

중국, 국경경비 강화(12.29)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06년 중국 국방백서’를 통해 국경경비 강화 노력을 소개함.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해치며, 대량탈북의 가능성에 대한 국경관리 노력을 강화
 - 2003년 북한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기존의 무경 공안변방부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해방군 변방부대 투입
 - 국경경비와 대사관 경비, 대테러사건에 투입되는 인민부장경찰(무경)은 현재 66만 명 선으로 증원

2. 납북자 · 국군포로

납북 김영남 가족 기자회견(2006.7.2)

- 1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납북 김영남을 상봉한 가족들은 북한이 8월 아리랑 공연에 초청할 경우 온 가족이 북한을 방문, 재회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함.
 - “송환의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분단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
 - 납북고교생 김영남을 상봉한 모친은 상봉이후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 입원 후 가료중이며, “북한에 다녀온 뒤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하다고 호소한다”고 알려짐.

- 배석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파악된 정보로는 납북 고교생 4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1968년 동해에서 납치된 어부 김인철도 고교 3학년생이었다고 밝힘.

정부, 납북이산가족상봉시 납북자 79명 상봉대상에 포함 생사확인 요청

- 2000년 이래 14차 상봉행사(2006.6)까지 전후납북자 79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한 결과 북한은 14명 생존, 18명 사망, 47명 확인불가로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짐.
 - 14명의 생존자 중 13명의 납북자가 납북가족과 상봉
 - 납북고교생의 경우에도 제8차 상봉(2003.9) 최승민, 제10차 상봉(2004.7) 이민교, 제14차 상봉(2006.6) 홍건표에 대해 정부가 생사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북한이 '확인불가'로 회신

북한, 일본 언론 6개사(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NHK, TBS, NTV, 교도통신) 초청(2006.7.4-8)

- 북한이 일본언론사 초청사유를 “친선”이라고 밝혔으나, 김영남 기자회견이후 일본 내 메구미와의 관련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생존설과 유골 진위 논란 등 일본 내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이 직접설명하려는 의도로 평가
 - 김영남은 특수기관원 규칙상 메구미의 피랍경위를 묻지 않았고, 사진공개 등을 통해 결혼생활이 행복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 사망시기는 “시간이 없었고 당황해서 썼기 때문에 착각하여”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
 - 북한 화장시설 미흡으로 메구미 유골에 다른 사람의 유골이 섞였을지 모른다던 이전의 증언을 부인

납북자 가족단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7.4)

-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회장 이미일)와 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최우영) 등 납

북자가족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게 납북자 송환노력을 촉구함.

- “납치사건을 부인하는 북한과 기만적 상봉으로 납북자 가족에게 절망을 안겨 단 준 통일부는 각성하고 사죄하라”
- 북한에 대해 납치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송환하라고 촉구
- 정부에게도 납북자가 단순 이산가족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임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
-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4차 상봉시 최초로 상봉이 예정된 6.25 전쟁납북자 유정옥(납측 가족)의 가족상봉이 무산된 것에 대한 좌절감 표시
- 북한이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하였으나 믿을 수 없다고 성토
- 납북자가족협의회는 납북자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송환이며, 상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방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에게 분명한 범죄행위인 납치사실을 시인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특별상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시 납북고교생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별도의 특별기구를 통해 납북자문제해결을 촉구
-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고교생 5명에 대한 사실조사 및 송환요구 등과 관련 국회청원

전후납북피해자 특별법 입법예고(7.19)

-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동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함.
 - 3년 이상 납북 이후 귀환한 납북자는 의료보호, 생활지원, 북한학력 및 자격 인정,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교육지원, 재정착교육, 정착금지급 등 정착지원 혜택 수여
 - 납북 관련 국가로부터 고문과 폭력을 당해 상해 혹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지급
 -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예정
 - 전시 납북자는 대상과 실태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귀환납북자의 경우에도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함.

납북 동진호 선원 입국재, 탈북실패 수용소 수감(7.31)

- 서해 백령도부근에서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동진 27호 선원 입국재(1987.1 납북)가 세 차례 탈북을 시도하다 청진 제25호 수성교화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짐.
 -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가 밝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 실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발표(8.14)

- 가족협의회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과 김명호 교수 공동으로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납북자 실태를 집중 조명함.
 - 현재까지 확인된 전쟁납북자 96,01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전쟁 발발 후 3개월간 서울의 인텔리 계층이 집중적으로 납치되었음을 증명

한·중 국군포로 인계원칙 합의(2006.4) 공개(8.31)

- 한만택씨 북송사건(2004.12)을 계기로 국방부 포로대책반을 중심으로 중국과 협상을 거쳐 처리원칙에 합의함.
 - 우리 정부가 인지하는 모든 국군포로를 일단 중국정부에 신변인계 2주 조사 후 인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입국 국군포로 10여 명 선으로 알려짐.

일본 납북자가족, 유엔방문 대책 호소(10.30)

- 일본 납북자 가족들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하여 납북자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들의 국적은 일본, 한국, 중국, 레바논, 태국, 루마니아,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등 12개국에 달한다고 주장

과거사진상위, 납북사건 관련 인권유린 규명(12.7)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에 대해 중대한 반민주적 인권유린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정부에 권고함.
 -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공법위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능
 - 당시 8명이 북한경비정에 나포 억류되었다가 4개월 후에 귀환한 후 공안당국에 연행되어 반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
 - 여수경찰서 34일, 부안경찰서 1개월 간 불법감금 조사,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강구

3. 이산가족

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7.19)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장재언)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이상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안 논의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 남측이 제19차 적십자회담에서 그 동안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쌀과 비교제공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
 - 8.15 특별화상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2007. 7 준공예정)도 중단

북측요구에 따라 금강산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7.21)

- 북측의 금강산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요구에 따라, 상주인원 150명(현대아산 등 시공사 직원 28명, 노무인력 122명)중 1차로 102명 철수함.
 - 금강산 관광 북측사업자인 북한명승지종합개발회사가 면회소건설인력 전원

철수를 요구했으나, 건설자재나 장비에 대해서는 철수를 요구하지 않음.

한적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촉구(10.27)

- 한적 101주년 기념식에서 한적총재는 핵실험이후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남북간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협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함.
 -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 등이 논의되어야 함.

대한적십자사 총재, 독일 적십자사에 독일인 이산가족 북한 남편 소재파악 협조 요청(11.16)

- 독일인 레나테 홍(69)의 45년 전 헤어진 남편과의 상봉요청을 접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독일적십자사에 협조를 요청함.
 - 독일 적십자사 심인사업부 관계자 2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홍옥근(당시 독일 유학생)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북한적십자사와 논의할 예정

4. 분석 및 평가

납북자관련 국내외 관심제고 및 납북피해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

- 김영남의 가족상봉을 계기로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 관련 관심이 다시 제기 되었고 북한당국이 일본언론사를 초청하여 설명하였으나,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납북자 및 가족들의 인권침해관련 특별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신청이 증가되고,
 - 과거사정리차원에서 납북피해 사실 확인 관련 진상조사가 이루어짐.

대북지원과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연계 공식화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정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건설 사업이 지속되지 못함.
 -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산가족사업이 대북지원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
 - 민로당 방북단에게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언급하면서 남측지원을 유도하려는 입장 표명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지속

- 국내외 탈북자 관련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탈북자 보호관련 관련국들의 대책을 촉구함.
 -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 지속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 탈북자들이 구체적인 인권침해상황을 국내외서 지속적으로 증언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및 미국정착 지속

- 중국 및 동남아 등 제3국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및 미국 정착 욕구가 지속됨.
 - 특히 미국의 탈북자 정착허용을 계기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던 탈북자들이 미국공관에 진입하여 미국정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
 - 태국이 탈북자 국내입국의 주요 창구로 활용됨으로써, 동남아 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대책 재점검이 필요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근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곤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2006)